

G. P센터 식료품 제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 취재/김용화 과장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농민은 난파선을 타고 공해상을 떠도는 처지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거부감 어린 눈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차 있는데 사실이다.

양계산업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축산업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음에도 기반을 견실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히 않아

못내 아쉽기만 하다.

우선 널리 산재해 있는 양계인들이 보는 선진양계산업의 시가과 이를 취합 제도적인 뒷받침을 수행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야 외유내강의 원리에 입각해 소위 말하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환에 시달려 흑백의 논리만 펴는 헛된 소모전으로 수출국의 입장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양계산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다.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기술축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상의 노하우(Know-How)가 없어서 UR 농산물그룹협상의 타결이 줄 직접적인 피해도 크다고 보고 있으나 서비스그룹 협상타결이 될 경우 유통부분에 뛰어들 외국기업체의 상표화를 통한 고급화가 소비자를 자극한다면 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이다.

직접적인 피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생산 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애써 생산한 물건이 소비자에게 원활히 유통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계산물은 닭고기와 계란으로 대별되는데 닭고기의 경우에는 도계장의 혁신적인 시설현대화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계란은 GP 센터가 생산지와 근접한 곳에 설립되어 위생적인 처리를 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소비증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여러 계열화 주체들이 도계장 및 GP 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비도 막대하여 농축산물 유통개선에 정부의 금융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GP 센터의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의 정식적인 표준산업 분류상의 식료품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임의로 도·소매업으로 취급되고 있어 농공단지 입주불가는 물론 부업단지까지도 지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현행 계란과 관련한 경제기획원 표준산업분류에는 「15489 달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으로서 달걀 껍질까지, 흰자와 노른자의 분리 및 건조 등 새알가공품, 굵거나 볶은 견과, 견과가공품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껍질을 제거한 달걀, 난황(신선, 저장처리된 것), 난백으로 되어 있다.

농공지구와 새마을공장 시책비교

	농공지구	새마을 공장
○입 지	계획집단 입지	자유개별입지
○위 치	군단위(지정생활권 위주)	면단위(분산단립)
○입주기업	건설한 기업	소규모 영세기업
○경 영 자	전문경영인	현지유지 등(경영경험 부족)
○지 원	종합지원	부분지원(세계·금융일부)
○개 발	공영개발후 분양	사영개발



“양계산물의 상품적가치가 향상되어야 소득증가로 소비기호가 고급화되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현재의 양계산물 유통구조로는 질적인 고급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인 정부의 제도를 개선, 보다 쉽게 양계산물을 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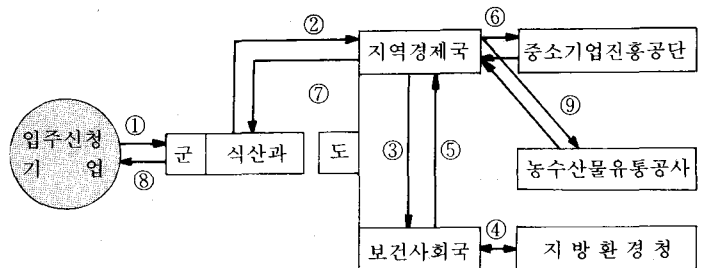
만약 GP 처리가 식료품제조업으로 포함되어 농공지구 입주가 가능하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농공지구입주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농공지구 개발시책

1. 추진경위

70년을 전후하여 농어가의 농외소득증대와 도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어촌공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개발방식



농공지구개발소요자원 조달내용

(천원)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비보조/평	10(-)	20(10)	30(10)
○국비융자/평	10(1)	20(10)	20(10)
○지방비보조/평	5(-)	5(5)	5(5)
합 계	25(-)	45(25)	55(26)

- 1)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제외한 구역내 면적에 국한함
- 2)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 3) 대기업입주 지구에는 ()와 같이 지원

농어촌지역의 중소규모 계획집 단입지로 개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 해당 시·군이 공영개발·분양하고 입주기업의 자의적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입주수요 확보후 개발에 착수하여 유희화를 방지토록 한다.

3. 개발 및 입주지원

농어촌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상쇄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를 하게 된다.

4. 농어촌 환경보전 및 농어민 취업촉진 등 보원시책 병행

입지 및 기업에 대한 환경검토, 공해 기업입주금지,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농어민 취업알선과 부업훈련, 공동탁아소 설치 등 지원시책 추진을 한다.

농공지구개발은 관련법령적용 및 지원사항이 많으므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조정하고 업무

번잡을 해소키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식료품업종의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I. 농공지구 입주

1. 입주자격

공해업종을 엄격히 규제하는 외에는 기업규모·생산업종 및

3. 금융지원

입주전 사업성검토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일반농어촌		추가농어촌		우선농어촌		상환조건
	금융한도	금리	금융한계	연리	금융한계	연리	
•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8.0%	3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7.5%	5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7.0%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8.0%	2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7.5%	3억원 이내 (소요의 100%까지)	7.0%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합 계	3억원		5억원		8억원		

- 1) 금융한계는 '90. 1이후 지정심(도)된 단지부터 적용
- 2) 금리는 '90. 1부터 전면 시행

창업, 이전, 분공장 등 공장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다. 입주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노동집약기업·현지농산물 등을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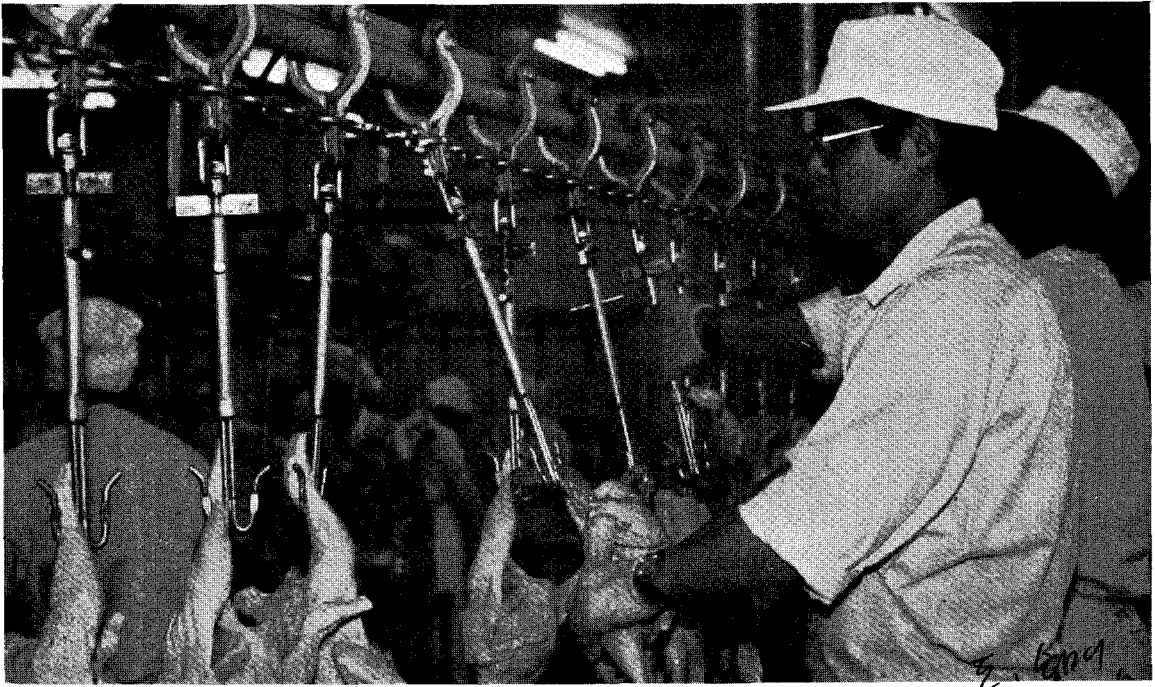
2. 입주절차

○개별공장별 환경영향검토(필수검토)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 각 도보사국에서 책임검토하되 환경보전법시행령상 배출시설 규모가 1·2·3종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사업성검토(선택검토)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시설 및 운전자금소요에 대한 정부재정의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입주기업의 부실화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적
합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한다.

Ⅲ. 입주기업지원

1. 부지조성에 대한 정부지원 (분양가 저렴)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 대체
농지조성비를 면제(평당 9천원
내외로 '93.12까지 한시적임)

○농어촌지역의 불리한 입지여
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지원

○보조(국비 및 지방비)는 입
주기업이 부담하는 분양가에 포
함되지 않음.

양계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

도록 생산자의 농장내에서 노력
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산물이 소
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서의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함은
이미 공히 느끼고 있는 사항
이다. 그러나 현행 여건상 상당
한 생산비절감요인이 각종 제도
에 묶여 의욕적으로 양계산업을
하려는 많은 양축가들이 곤욕스
러워하고 있다.

계란의 위생처리 및 포장과정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은 도
외시한채 GP센터가 그저 단순한
농축산물 집산지로 취급당하는
일이나, 육계산업의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해야 하는 도계장 또한
폐수방출업체로 낙인이 찍혀 입
주를 거절당함은 물론 허가 또한

까다롭기 짝이 없다.

농장에 있어서도 이점은 마찬
가지다. 양계단지(축산단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도 모자랄판
에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양축가
들에게 인근지역 주민 동의서가
지 건축허가시 요청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

GP센터는 단순한 계란 집하장
으로 취급 도·소매업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상품적가치를 창출
해 내는 식표품 제조업으로 표준
산업분류에 분명히 명시하고 각
종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것
이다. **221**